

공공기관장 영남 편중 호남 소외

도공·신보 등 노른자위 '씩씩이'

금융공기업 사장·감사 15명중 11명 장악  
기업에도 영향... 영남 우대 확산 가능성

이명박 정부가 '영남 본색'을 드러내며 '영남 편중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차관 인사 결과,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인사라는 비판 홍수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장 인사에 노골적으로 영남 인사들을 심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인사 편중은 기관장 이하 공기업 임원 및 직원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영남 편중 도미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장 인사 분석=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주공·토공·도공·한전 등) 및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 25명 중 52%인 13명이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남 출신이었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북 출신은 절반 수준인 7명(28%)에 불과했다.

또 기타 공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금융감독원·한국개발연구원(KDI)·강원랜드·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 들어 임명된 48명의 기관장 중 43.8%인 21명이 영남 출신인 반면

18.9%인 10명만이 호남 출신이었다.

◇중요 기관장은 더욱 심각=문제는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에 있다. 영남 출신들은 비율에서 40~50%를 점유한 데 그치지 않고 노른자 공공기관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민주당 측에서 최근 임명된 도로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50개 공공기관장 중 영남 인사가 29명으로 신규 기관장의 58%나 됐다. 이는 호남인사가 6명인 것과는 크게 비교되는 수치로 '영남 싹쓸이'와 '호남 소외'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 같은 주요 기관장의 호남 독식은 해당 기관에서 '독수리' 최고인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산업에까지 영남 우대 효과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공기업도 영남 장악=국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8일 "13개 금융 공기업 선임 사장 9명, 감사 6명 등 15명중 11명이 영남 출신으로 그 중 8명은 권력 핵심부와 지연·화연으로 얽혀있다"며 영남 편중 인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금융 공기업 선임 최고경영자·감사현황에 따르면,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경북 예천),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경남 하동), 이종휘 우리은행장(대구),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경북 안동), 진영욱 한국투자공사 사장(부산), 정연태 코스콤 사장(경북 울진),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대구), 정연길 서울보증보험 감사(경북 포항), 이승문 산업은행 감사(경북 칠곡), 김준호 기업은행 감사(경북 구미), 조현병 우리은행 감사(경남 산청) 등이다.

이승문 산업은행 감사(경북 칠곡), 김준호 기업은행 감사(경북 구미), 조현병 우리은행 감사(경남 산청)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김황식 대법관이 28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가진 후 이용훈 대법원장의 환송을 받으며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관 퇴임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는 28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법관생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해 공직사회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 바로 서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감사원장직에 나아가기 위해 대법관의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34년 몸담은 법원을 떠나려 하니 한없이 허전하고 안타깝다"며 "이대로 머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감사원장 수락 배경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

“독립·중립성 확고히 지키는 감사원 만들 터”

고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선진 민주국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경제복지국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해온 일과 감사원장의 직책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평생 봉직하던 일이라 상대적으로 쉽고 편한 법관의 길을 벗어나 어렵고 힘든 감사원장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밥집을 설치하며

많이 고민하고 주위의 여러 분들과 상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장성 출신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 광주지법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지난 7일 감사원장에 내정됐다. 연합뉴스

‘독도 한국령’ 바로잡기 쉽지 않을 듯

■ 美 ‘주권 미지정 지역’ 원상복구 가능할까

충분한 자료·근거 제시 등 외교적 노력 필요

미국 지명위원회(Board on Geographic Names·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규정할 데 대해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해 ‘원상복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BGN의 이 같은 결정이 파악된 후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긴 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교부는 신각수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한 ‘독도 태스크 포스’를 구성, 세계 각국의 독도 오기(誤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주미한국대사관은 27일 이태식 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 독도 관련 표기를 바로잡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땅 독도’를 줄여서 ‘주권 미지정 섬’으로 바꿔놓은 BGN의 결정은 적지않은 과장이 예상된다.

BGN은 미국 연방기관으로서 외국 지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면 국무부, 국방부 등 다른 정부 기관들도 이

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내 독도 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다른 기관들이 이를 지지 않을 경우 BGN으로선 강제할 수는 없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문제는 미국 사회의 전통과 분위기다. 미국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긴 하지만 명칭이나 도량형 등에 있어선 ‘기준의 통일’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록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미국내 독도표기를 바로잡겠다고 적극 대응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시급성과 중대성을 뒤흔게나마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이번 독도 표기 관련 결정은 BGN이 내린 만큼 정부는 BGN에 이

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BGN은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제기하면 일단 BGN에서 이를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BGN이 이미 한번 내린 결정인 만큼 이를 번복시키기 위해선 충분한 자료와 근거 제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힘든 숙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BGN이 주요 결정을 내릴 때는 국무부나 국방부 등 주요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상당 정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무부, 국방부 등 미 행정부 및 학자들과의 다각적인 접촉과 설득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사가 “앞으로 국무부 등 미국의 관련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근거에서다.

이런 노력과 함께 미국내 각 기관에 BGN 결정의 문제점을 알리며 일방적, 맹목적으로 BGN을 결정을 따르지 말고 한국의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요구된다. 연합뉴스

이태식 주미대사 문책 교체

■ ‘헛발질’ 외교라인 대수술 불가피

청와대는 28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최근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또 외교쪽에서 일이 터졌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번 쇄고기 파문에 따른 ‘인적쇄신’ 때부터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었다”면서 “이번 독도 표기 문제가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초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을 이끈 주된 요인이 외교안보라인의 실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쇠고기 파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문제제기 발언, 조지 부

시 미국 대통령 방한시 발표와 관련한 한미 외교당국간 ‘엇박자’, 금강산 관광객 피사건 논란 보고,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 등에 이르기까지 외교교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독도 문제의 경우 국민 자존심과 관련된 사안인데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어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최근 부상하고 있는 문책론은 청와대 내부보다는 정부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경우 최근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된데다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사 사건 직후 ‘국가위기상황센터’ 설치 등 발빠른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정부부처는 잇단 실책에다 청와대와도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외교통상부가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태로 이태식 대사를 비롯한 주미대사관에 대한 문책은 물론 외교통상부 전반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gnam' (심양) and 'Gwangju' (광주) areas. It features a grid of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such as location, price, and features. The top section includes a large banner for 'Sungnam' and 'Gwangju' with contact information. Below this, there are several smaller banners and a large table of listings. The table columns include property type (e.g., '100㎡', '150㎡'), price (e.g., '1,588,000', '2,000,000'), and other details like '100㎡', '150㎡', '100㎡', '150㎡'. The bottom right corner has a section for '2008년 7월 무인택배서비스' (July 2008 Unattended Mail Service).